



전주매일

정부, 익산·군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난 8~10일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선포 기준액 충족 익산은 전지역, 군산·무주 일부 피해액 초과 지역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되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하도록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

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익산시), 18일(완주군), 24일(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피해 현지 방문할 때마다 지역 주민·도내 정치권·도와 시군 등이 합심하여 정부에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 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

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제·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 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이란 슬로건으로 시군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김제시를 찾아 시청강당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의 민생, 김제시와 함께 살리겠다”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김 지사, 시군방문 - 김제 도민과의 대화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 등 현안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제시를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하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의 소통기회를 확대해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 지사의 행보에 맞춰 김제시의 주요 현안과 실정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제시의회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서백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에 대해 논의한 후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 언론인들과 만나 지역의 분위기와 여론을 경청했다.

이어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고,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며 도정 철학과 주요 사업들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제시민들이 △동현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지원,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김제시 유치 건의, △혁신도시 인근 용지 축산밀집지역 약취 해결 건의, △김제시 논농산업 거점지구 지정 건의 등 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후 오찬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단체장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김제 방문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김제시가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 김제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성장하고, 새만금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 여름축제로 전환

내달 14~18일 소리문화전당 등에서 개최 판소리·농악·클래식 등 78개 프로그램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하안양옥집, 전라감영 등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고, 전 세계 음악적 유산과 소통,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전북자치도를 세계속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가꾸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판소리를 국내외에 알리는 목적과 함께 더 나아가 전통음악(농악 등), 음악적 유산인 다양한 장르(클래식, 대중음악 등)까지 확대 추진 가능하도록 목적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축제가 더 폭넓고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기대가 크다. 벌써 제23회를 맞이하는 올해 전

주세계소리축제는 내용적으로 판소리의 가치와 향유를 위한 예술성을 중심으로 하되, 전통음악인 국악,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조화롭게 안배하고 전 세계 우수 공연을 유치하는데 집중해 진행된다고 전북자치도에서 알려졌다.

그동안은 가을에 열렸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적으로 가을 축제 스타일 현상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위해 방학기간인 8월 여름 축제로 전환했다. 14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고 본행사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축제 기간을 5일로 조정했으며 4~11월 사이에 진행된다.

축제의 총사업비는 32억4,700만원(도비 2,649, 자체수입 598)이고, 올해 축제의 키워드는 로컬 프리즘(시선의 확장)에서 판소리, 농악,

클래식, 대중음악의 조화에 두고 진행된다.

올해 축제 진행 프로그램은 7개 분야, 78개(총 105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더 알차고 내용이 풍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있다.

이번 개막공연은 ‘종물오페라 잡색’으로 8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모악당에서 열리며, 국가지정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이 올랐다. 폐막공연은 8월 18일 오후 6시 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며, 명창 조상현씨와 신영희명창이 빅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올해에는 특별히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초청하여 공연하는데, 한 사람의 공연만으로도 화제가 되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한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경화와 임동혁의 첫 듀오 공연은 8월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 정부에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제 개선책 저출생 대응 협력 방안 등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

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제6회 협력회의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7회 협력회의의 안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상정안건을 선정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제도가

선 및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 등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심사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선됐다.

▶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